

한국당 '강기정 논란' 빌미로 국회 일정 스톱

“원내대표에 고성 무례” 경질 요구…민주 “정치공세 과도” 3당 경제·민생법안 처리·검찰 개혁 실무회동 일방 취소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며 정기국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대표 간의 이른바 ‘3+3’ 협상 중단 카드까지 내놓고 있어 경색 기류는 한층 짙어지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뛰어든 강 수석,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이런 정무수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야당과

대화가 아니라 전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 표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제 원내대표끼리 회동을 했는데 강 수석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협의하는) ‘3+3(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제’도 당분간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면서 당분간 각종 여야 협의의 중단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이 합의 처리해야 하는 경제·민생 법안 협상이 강 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중단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시는 대로 강 수석을 하루 속히 해임

하고 국회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당장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3당의 경제·민생 법안 처리 관련 첫 실무회동이 취소됐고,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회동도 연기되는 등 여야 공식 협상 테이블 가동이 줄줄이 중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야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일절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와대발 돌발 변수에 마땅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내부적으로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미 당일 운영위에서 모두 해소된 사안”이라면서도 “강 수석의 불필요한 발언이 당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서는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여당 의원들이 해야 할 정도로 하던데 조금 과도했다”며 “당도, 청와대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내달 2일인 데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11월 27일)·검찰개혁법안(12월 3일) 등의 본회의 부의 일정도 다가오고 있어 여야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마주앉을 수밖에 없어, 현재의 교착 국면이 장기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처리라는 현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란 슈퍼 이슈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강기정 수석 파동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일 국민·기업 기부로 징용 피해자 배상” 문희상 의장, 일본 와세다대 특강서 방안 제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의 해법으로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α(알파)’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의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은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거부반응이 있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1+1+α(한일 기

업 및 한국 정부 참여로 재원 마련)’ 방안이 거론됐고, 이번 문 의장의 제안은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알파’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문 의장은 나아가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아베에 “징용문제 여러 선택 가능” 요미우리신문 “1+1안 외에 유연하게 대응할 뜻 보인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징용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직접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아베 총리와 대화할 때 한국인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약 11분간 이어진 대화에서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론한 후 “일본의 입장은 이미 전한 대로”라며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등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하자 문 대

통령이 이런 생각을 밝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해결책의) 전부라 아니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한국 정부가 올해 6월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구상(1+1안) 이외의 방안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키워드는 공정”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5일 첫 회의를 열고 총선 ‘밀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 혁신, 미래’로 잡았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조국 사태’를 거치며 중도층을 떠나게 한 ‘공정’ 문제에 집중해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성과 청년 등 소수자의 목소리 반영에도 무게를 뒀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윤호중 총선기획단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강렬한 요구를 수용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여성·청년이 후보자가 되는 것을 넘어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도 더 강화하겠다”며 “최근 우리 당은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 수사자 법안을 낸 바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분들에게 자녀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리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어 “우리 국회가 품격 없는 국회가 되고 손가락질받는 국회가 되는 이유는 ‘막달’”이라며 “혐오 발언 이력이 있는 분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2% 경제성장을 사수 모든 수단 동원”

“재정 신속 집행”… 내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을 2%대 방어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론’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어막을 치려는 전략이다. 나아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활용해 이에 철저히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제성장률 2%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비상이 걸렸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맞물려 일부 당 지도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올해 재정의 집행을 서둘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재정 집행률과 관련한 통계조사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국당 빚발치는 쇠신 요구

김태흠·김용태 “영남권 중진·황교안 기득권 내려놔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확산하면서 당내 쇠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의 실책이 이어진 상황에서 황 대표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시도 논란은 쇠신론의 불씨를 지민 모양새다.

황 대표는 5일 ‘공관병 갑질’ 논란에 이어 ‘삼정교육대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박 전 대장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관망과 우려를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황 대표를 향한 당내 굵직한 시선은 이어졌다. 인재 영입 논란뿐 아니라 전날 출범한 총선기획단을 놓고도 “변형된 인적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총정권 재선인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

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영남권·강남3구 3선 이상 중진 옹호, 황 대표의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쇠신을 공개 요구했다.

한국당 현역 의원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것은 황 대표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초선 의원들은 오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당 쇠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도권 3선의 김용태 의원은 “이제 황 대표가 인적 쇠신의 구체적인 수치와 즉각적인 보수통합 착수에 관한 복안을 놓고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물갈이의 경우에도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한다는 대답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정시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2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